



방송통신위원회

보도자료

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
하나 된 열정
하나 된 대한민국 

2018년 1월 30일(화) 배포시점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공일:
2018.01.30.(화)

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이 현 과 장 (☎02-2110-1320)
박경주 사무관 (☎02-2110-1321)

방송통신위원회,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

- ◆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마련, 오보·막말방송 모니터링 강화 등 신뢰받는 방송통신 환경 조성
- ◆ 불법·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사업자 삭제·접속차단 의무화 및 가짜 뉴스 자율규제 기반 조성
- ◆ 시청자의 방송참여 확대 및 맞춤형 미디어교육 등을 통한 전국민 미디어리터러시 강화
- ◆ 통신서비스 이용 분쟁 해결을 위한 「분쟁조정제도 도입」 및 인터넷 방송 결제한도액 하향 조정
- ◆ 분리공시제 도입, 국내·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로 출고가 인하 유도 및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
- ◆ 방송사·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인권선언문 제정
- ◆ 중국·동남아 등 공동제작협정 체결 및 한류시장 다변화
- ◆ 가상통화 거래소 등 신유형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 점검 강화 및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환경 조성
- ◆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UHD 중계 기반 마련

-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이효성)는 1.30.(화) '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'을 발표하였다.
- 2018년도 업무계획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을 중심으로,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,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담았다.

□ 201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특징적인 사항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.

1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.

-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미래지향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및 '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' 설치 등 수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.
- 또한 방송사 재허가·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·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, 방송 제작·편성의 자유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, 오보·막말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정 제재도 강화한다.

2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,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.

- 포털 등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반론기회를 보장하고, 임시조치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「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」를 설치한다.
- 불법·유해정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음란물 유통 사실을 인지한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의 삭제·접속차단을 의무화하며, 피해자 요청 시 긴급심의를 실시하여 삭제·차단 대응을 현행 약 11일에서 2~3일로 단축한다.
-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하고, 가짜뉴스 신고를 활성화하며, 사실 관계에 논란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논란 (disputed) 표시를 부착하도록 한다.

3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한다.

- 시청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며, 공동체라디오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.
- 스마트 미디어 시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미디어를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도록 청소년·노인·주부·장애인 등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, 경기권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대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광역권별 1개 센터를 구축한다.

④ 신기술 등장으로 복잡·다양해지는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.

-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「분쟁조정제도」를 도입하고, 단말장치 리콜 시 이용자 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며,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은 하향 조정한다.
- 단말기 지원금의 이통사·제조업자 재원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및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, 국민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앱의 데이터 소모량을 공개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.

⑤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甲乙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방송통신 경쟁환경을 조성한다.

- 방송사-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·지급,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,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. 또한,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하고 포털-중소CP, 이통사-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.
-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침해,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, 해외 콘텐츠사업자(CP)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.

⑥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한다.

-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,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, 협찬의 기본원칙, 필수적인 금지의무 등을 중심으로 협찬제도를 개선한다.
- 또한, 한류 방송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한령 등으로 중단되었던 중국과의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, 동남아·캐나다 등으로 한류시장을 다변화하며, KBS월드·아리랑 TV 등 국제방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확보, 콘텐츠 제작 능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.

7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한다.

- 사전동의 예외를 확대하는 등 동의제도를 실질화하는 한편,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며,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관·제출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.
- 비식별조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제화를 지원하며, 사물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, APEC CBPR*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EU 적정성 평가** 추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를 구제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.

* CBPR (Cross-Border Privacy Rules) :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美, 日 등 가입

** 적정성 평가: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

8 마지막으로, 방통위는 평창동계올림픽의 UHD 중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.

-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UHD 수신환경 및 중계 준비현황을 점검·보완하고, 대관령 보조국을 추가 운영하며, 올림픽 주경기장·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에 UHD TV를 배치하여 현장에서 경기를 생생하게 중계한다.
- 방통위는 이 외에도 OTT 등 신유형서비스 제도 정비, 재난방송의 신속성·정확성 제고, 장애인방송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및 통합 시청점유율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- 또한 방통위는 국민숙의제 등 국민이 방송통신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, 열린근무혁신 10대 제안 등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대내외 소통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.
-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에서 제시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송통신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붙임 : 1. 2018년도 업무계획 요약본.

2. 2018년도 업무계획 완본(별도 첨부). 끝.

I. 신뢰받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

□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

- (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역할 정립) 미래지향적 공영방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방통위 내에 자문기구인 '방송미래발전위원회'를 운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추진
- (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제고)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신료 산정·징수·배분·평가 등을 위해 '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' 설치 등 개선방안 마련
- (방송 제작·편성의 자유 보장) '17년 실시한 편성규약·편성위원회 관련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,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'편성규약 가이드라인' 마련
- (오보 제재 등 방송의 품격 제고) 방송의 오보·막말에 대한 모니터링, 법정 제재 강화 및 종편PP의 오보·막말·편파방송 심의제재 감소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

□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

- (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추진) 고정형 TV와 스마트폰·PC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
- (지역·중소방송 활성화) 지역방송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지역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,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

□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

- (임시조치 제도개선) 포털 등의 일방적인 '임시조치'에 대해 정보계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반론기회 제공 및 「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」 설치
- (불법·유해정보 유통 차단) 음란물 유통사실을 인지한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에 삭제·접속차단 의무화 및 긴급심의 실시로 삭제·차단 대응(11→2~3일) 단축
- (가짜뉴스 확산 방지)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로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 조성 및 가짜뉴스 신고 활성화, 논란(disputed) 표시 부착 등 규제방안 마련

II.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

□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

- (시청자 참여·소통 활성화)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및 시청자위원회 운영 내실화,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등 제도 개선안 마련

- (미디어교육 확대)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기존 7개*에서 경기권(남양주)으로 확대(8개)하고, 청소년·노인·주부·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화
- (미디어 창의인재 양성)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, 동아리미디어교육, 학점인증 교육과정 확대 및 1인 미디어, VR, 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미디어 프로그램 실시
- (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)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방송 확대 및 장애인용 방송 수신기 1만 5천대 보급, 장애인방송 주시청시간대 편성 의무화

□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

- (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보호 정책)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이용자 불편·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능정보기술 인식도, 이용행태 등을 조사하여 제도 개선안 마련
- (피해구제 실질화)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「분쟁조정제도」 도입 및 단말장치 리콜 시 이용자 보호조치 근거 마련
- (이용자 피해·불편사항 개선) 결합상품 원스톱 해지절차 방안 마련 및 인터넷 방송 과다 결제 해소를 위한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 및 미성년자 보호대책 마련
- (통신비 부담 경감)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및 국내·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, 주요앱 무선데이터 사용량 공개

Ⅲ.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

□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

- (방송서비스 분야) '17.12월 발표한 외주제작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방송사-외주사 간 수익배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5개 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, 홈쇼핑시장의 제작비 전가 등 불공정거래 관행 엄중 조사 제재
- (통신서비스 분야)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, 국내·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분야 상생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포털·SNS 등 플랫폼 시장 급성장으로 증대된 플랫폼사업자와 중소CP 간 불공정거래 개선 추진
- (결합서비스 분야) 결합판매를 통한 불공정 경쟁 방지 및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결합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

□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

- (방송광고제도 합리화)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,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, 협찬의 기본원칙, 필수적인 금지의무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협찬제도 개선

- (시장조사 강화) 한한령으로 중단되었던 중국과의 공동제작 협정 협의를 재개 하는 등 중국·동남아 등으로 한류시장을 다변화하고, 국제방송(KBS월드, 아리랑TV)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, 콘텐츠 제작능력 제고 방안 마련

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개선

- (해외사이트 불법정보 등 유통 차단)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침해, 음란물 유통 등에 대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국제공조수사 추진 및 해외정부와 공동대응체계 구축
- (해외기업 조사·제재 강화) 해외 콘텐츠사업자(CP)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·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 강화
- (중편 비대칭 규제 개선) 외주제작 편성의무 부과 및 중편 의무송출 제도 개선 등 타 매체와 중편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대칭 규제 재검토

IV.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

□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

- (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) '17년 말 광역권·평창으로 확대한 지상파 UHD 방송을 활용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을 생중계하고, UHD 수신환경 개선 추진
- (MMS 본방송 도입) EBS-2TV 시범서비스의 본방송 전환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입법과 하위 법령 개정 추진 및 콘텐츠 활성화 지원
- (신유형 융합서비스 제도 정비) 유료방송 VOD의 법적지위 등 제도 개선 추진 및 해외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OTT 등 신유형서비스 분류 체계 등 제도 정비 추진

□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

- (개인정보 실질적 보호 강화)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사전 동의 예외로 하는 등 동의제도를 실질화하고, 개인정보 침해 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'집단소송제도' 도입 검토 및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
- (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) 비식별 조치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비식별조치의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지원하며,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데이터기반 신산업 활성화
- (국제협력 강화) APEC CBPR('17.6월 가입)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, EU 적정성 평가 추진을 통해 우리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및 유럽 시장 진출 지원